

# 최순실 첫 재판... "혐의 전부 부인"

### 변호인 "안종범과 공모 사실 없다... 본인 컴퓨터 파기한 것은 증거인멸죄 안 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가 19일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가 이날 오후 2시10분에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최씨는 직접 "네"라고 답했다.

최씨는 공소사실 부인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날부터 많은 취재를 받았다. 확실한 모든 사유를..."이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11개 공소사실 중 8개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해 포레카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한 사실이 없다"며 "너블투게이와 K스포츠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는 민사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컴퓨터를 파기한 것은 본인의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올 한해 태극기와 촛불로 분열됐고 이 법정은 대한민국 사법



### 권력기관 적폐 대청소를 위한 대화

권력기관에 피해를 입거나 권력남용에 맞서 싸워 온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권력의 일탈과 횡포 사례를 직접 듣고 적폐 대청소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으로 진행됐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이크로팩트스퀘어에서 열린 '권력기관 적폐 대청소를 위한 대화'에 참석, 참가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대화에는

은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권력의 일탈과 횡포 사례를 직접 듣고 적폐 대청소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으로 진행됐다.

사상 초유의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현정 사상 현직에 있는 국정 최고 지도자를 공동정범으로, 주범으로 기소해 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심각성과 역사적 과장을 고려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합당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날 20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모사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 정우택 원내대표 "이만희·이완영 오늘 국조특위 논의 후 거취 결정"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순실 최측근 인사와 국회 청문회 질의응답 사전 회의 의혹이 제기된 친박계 이만희·이완영 의원에 대해 "오늘 오후 국조특위가 끝난 뒤 (거취 관련) 의견을 취합 해주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만희·이완영 의원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한다. (국조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나한테 우선 논의할 걸 가르쳐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의원의 사보임 여부에 대해서는 "(22일 청문회 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오늘 국조특위 회의가 끝난 뒤 상황 판단을 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정조사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련 의혹에 대해 논의한다. 의혹 당사자인 이만희·이완영 의원에 대해 출석해 해명 및 신상발언을 할 예정이다. /뉴스1

##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시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요청"

### 김승환 교육감 "도·농 학생 간 학교접근성 불평등...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로 접근한 결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9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타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국회에 이준식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의 중학교 가운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학교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또 이 교과서 한쪽당 평균 4.7건에 달하는 많은 오류가 나왔는데도 원고료는 쪽당 최대 2백44만원을 받았다"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은 지난주 토요일(17일) KTX 서울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한 뒤 "이에 관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교육부장관의 임정발표를 지켜본 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정당에 교육부장관 해임건의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비해 해임건의 의결은 요건이 매우 약하다. 단순히 업무상 무능, 과도도 사유가 된다. 의결 정족수도 일반의결 정족수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중·고생들이 학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 전보다 더 길어졌다는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 발표자료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헌법 11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일반적 평등의 원

칙을 교육영역에서 구체화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출신학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도시와 농어촌지역 학생들 간 학교 접근성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초래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는 많을 수밖에 없다. 비장애학생보다 장애학생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더 많은 것도 그래야만 교육평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권력자,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이 정도의 교육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개탄했다.

/정혜은 기자

### 김광수, 삼성특혜 국민연금공단 감사원 감사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은 1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삼성에 대한 특혜제공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맞물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3488억원의 평가손실을 입고 삼성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삼성은 이 댓가로 최순실 모녀에게 2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현직 복지부장관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측에 유리하도록 찬성을 증용한 정황과 문형표 전 장관이 합병 성사의 공을 인정받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 정우택, 원내수석 김선동·수석대변인 정용기 지명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친박 김선동 의원을 지명했다. 정 원내대표가 자신을 도와야 원내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 자리에 친박계 인사를 기용하면서 비박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수석에 김선동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에 정용기 의원을 임명하는 등 신임 원내대표단 인선안을 발표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친박계 김정재 의원이 유임됐고, 원내부대표단에는 박성중, 송석준, 민경욱, 박찬우, 정태욱, 염용수, 임이자, 송희경 의원이 임명됐다.

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정 원내대표는 '이정현 체제'에서 임명된 박맹우 사무총장과 염동열 수석대변인, 김성원 대변인도 유임했다.

염 대변인은 "첫번째로 지역 대표성을 우선으로 했고, 두번째로 능력을 고려했다. 세번째로 주류와 비주류 관계없이 인선을 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원내수석에 친박 김선동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는 "정우택 원내대표 관점에서는 김 의원을 중립으로 봐서 인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선동 수석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정부비서관을 지냈던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다. 최근 1'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참석한 인사이기도 하다.

김 수석 외에도 친박계 민경욱, 정태욱, 염용수 의원 등이 원내대표단에 포진했다. 박성중, 송석준 의원은 비박계, 박찬우, 임이자, 송희경 의원은 중립 성향이다. /뉴스1

### 검찰,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양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과 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 7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주현(52)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1

**장수군**

장수사과

방화동휴양림

논개사당

**모두가 가보고 싶은 장수군입니다.**

장수물 MALL

NAVER 장수군형 검색

천천면 남양리